

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

김창현(국토연구원 연구위원)

-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및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분산이 나타나고 농촌활성화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음
 - 2005~2010년 사이에 전체 베이비붐 세대 인구 중 수도권과 도시(洞)지역의 인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, 농촌(邑·面)지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약 2만 3천 명 증가함
 -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전이되기 시작하는 202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본격적인 감소와 고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상승이 전망됨
-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약 2/3 정도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고, 향후 10년 동안 농촌으로의 이주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조사됨
 -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66.3%가 은퇴 후에는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며, 13.9%는 이미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농촌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, 비수도권의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
 - 노후의 전원·휴양·여가 활동을 위한 농촌이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
| 정 | 책 | 적 | 시 | 사 | 점 |

- 1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전원 지향 성향을 농촌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비수도권 및 농촌으로의 인구분산과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
- 2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, 전원주거-경제활동-의료복지-활력증진 등 다기능 복합형의 농촌정주거점을 조성·육성하는 전략을 추진
- 3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·지자체·민간이 연계·협력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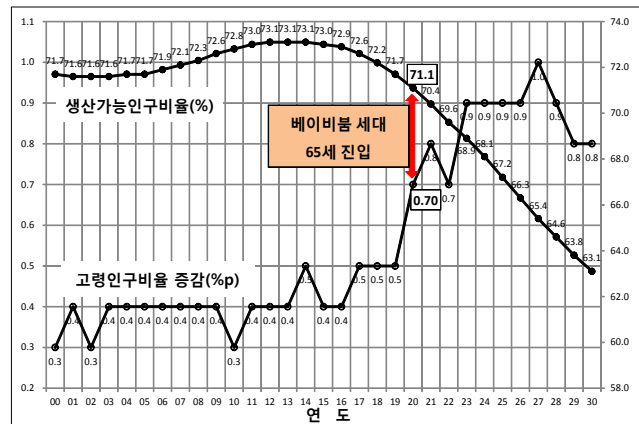
※ 본 국토정책Brief는 국토연구원에서 2011년 발간한 김창현 외, “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”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, 정리한 것임.

1.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동향

■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에 진입하였으며, 향후 이들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

-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의 9년 동안 출생한 인구로 2010년 현재 695만 명에 달하며, 전체인구(내국인)의 14.5%를 차지
-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도에 출생한 인구가 2010년도에 만 55세에 달함으로써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도래
-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의 증가폭이 2020년 0.7%p, 2025년 0.9%p 등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
-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 71.1%, 2030년에는 63.1%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 가속화가 예상

[그림 1]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의 장래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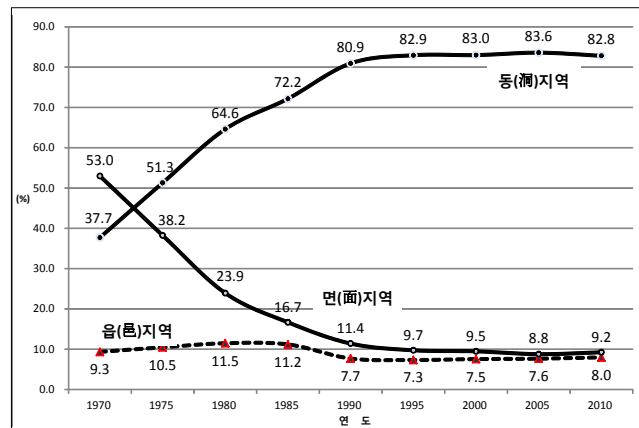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, 국가통계포털.

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과 읍·면의 농촌으로 분산하는 경향이 나타남

- 2010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 695만 명 중, 도시(洞)에 전체의 82.8%인 576만 명, 농촌지역(읍·面)에는 17.2%인 1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
-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0.8%p 감소한 반면, 읍면지역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각각 0.4%p씩 확대
- 2010년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48.5%가 거주하고 있으나, 최근 수도권의 비중은 0.3%p 감소한 반면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의 비중은 0.3%p와 0.1%p 증가

[그림 2] 베이비붐 세대의 도농 간 분포 변화



자료: 통계청, 인구총조사, 국가통계포털.

2.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(離都向村) 성향

●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 의향과 목적

-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2/3 정도가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
 - 응답자의 13.9%는 농촌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음

【그림 3】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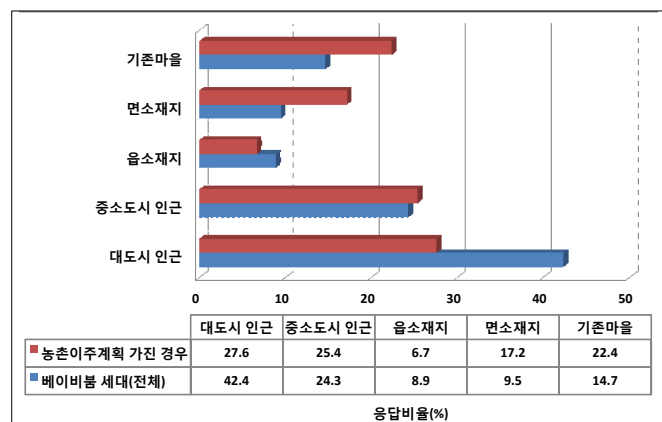


- 구체적으로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 85.8%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이주를 희망
 - 응답자의 41.8%가 5년 이내, 그리고 44.0%가 5년에서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
-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목적 중 “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 전원·휴양·여가 활동 영위를 위해서”가 69.1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 - 이에 이어 “농어촌 공동체 사업조직에의 참여를 통한 일자리 구득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”가 15.6%를 차지
 -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, 농림수산물 생산·가공·판매(11.2%), 음식점·숙박업·펜션·체험농원 경영(8.2%)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

●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공간 선호구조

-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대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
 - 비수도권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 (24.5%)을 특히 선호
-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 비수도권의 농촌마을(20.9%), 면소재지(14.2%), 중소도시 인근 농촌(16.4%)을 선호

【그림 4】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지역의 입지



[표 1]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지역 분포

구 분	이주 희망 농촌지역
서 울	경기(43.6%), 강원(14.6%), 전남(7.2%), 경남(6.3%)
부 산	경남(55.0%), 경북(6.4%) 경기(5.0%)
대 구	경북(70.5%), 경남(6.3%)
광 주	전남(79.5%), 전북(4.5%)
대 전	충남(41.5%), 충북(15.1%), 경기(5.7%), 전남(5.7%)



- 지자체의 특성과 베이비붐 세대의 도시민 입주수요 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설계로 주거단지를 조성

● 경제활력 창출기회의 마련

-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‘영농 등 일 자리 획득 등을 통한 경제적 활동’ 기회를 창출
 - 농림수산물의 생산·가공·판매,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사업조직 등을 통한 재능 제공과 활기차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
- 농수산물의 생산·가공·판매, 각종 프로그램의 교육 및 컨설팅, 사회적 기업 등에의 참여와 관련된 기존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
- 농촌 지자체의 장소적·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림수산업, 상공업,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별 지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

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료·복지환경 조성

-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항목으로 지적한 ‘의료·복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’을 적극 추진
- 요양병원·요양시설, 의료·복지시설 등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
 - 질적 수준 제고와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연계·통합하여 설치·관리·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
- 도시민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관리, 진료·치료 등 의료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

● 활력증진공간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
- 농촌전원 속에 거주하면서 휴양·여가활동을 통해 활력을 증진해가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건강·장수 프로그램을 운영

- 문화·체육 및 건강·복지 생활 향유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
 - 휴양·여가 및 문화·체육시설 등 활력증진공간 조성, 각종 건강관리 및 회복 프로그램, 학습·사회활동, 생산적 여가활동 등 건강·복지 생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- 소관부처별 사업들을 연계·통합하여 운용 효과를 제고
 - 문화·체육시설(문화체육관광부), 건강장수마을(농림수산식품부), 영양·보건·의료(보건복지부) 관련 사업들을 연계·통합하여 운용

4. 정책적 시사점

- 전원주거-경제활동-의료복지-활력증진 등의 다기능 복합단지 혹은 농촌 생활권 단위별 네트워크 형태의 새로운 농촌활성화 거점을 조성
- “전원휴양·의료복지·활력증진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·지자체·민간 간에 상호 기능과 역할을 분담
 - 중앙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나 지침 등을 통해 기존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·민간의 운용을 뒷받침
 - 지자체는 지역특성과 수요 여건에 의거하여 지역특화형 정주거점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
 - 민간은 사회적 기업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소프트한 측면의 운영과 관리를 맡음
- 추가적 재원확보나 예산편성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
 - 전원 주거공간 조성, 귀농·귀촌 관련 대책, 건강, 장수, 의료복지 등과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사업 및 정책들의 연계·통합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제고
- 설문조사 결과 일정수준 수요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(대)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단계적 추진을 검토

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김창현 연구위원 (chyunkim@krihs.re.kr, 031-380-0155)